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7년 11월 6일

| 금주의 이슈 |

10. 31 한·중 협의, 文정부의 對中 굴욕외교 전형

금주의 이슈

- ◆ 금주는 한국과 중국정부가 동시 발표한 10.31 한중관계 개선 합의에 대해 중국 측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 한국과 중국 양국이 발표문 형식으로 동시 공개한 한중관계 개선 합의는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중단과 이른바 ‘三不 약속’으로 알려진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 등 우리의 군사주권과 교환한 사대 굴욕외교의 전형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부당한 유린이라는 점이 철저히 무시된 데다,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미동맹 균열의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불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 양상에 따라 중국의 패권 추구가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

2017. 11. 6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I. 10.31 한·중 협의, 文정부의 對中 굴욕외교 전형

10.31 한·중 협의는 문재인정부가 한중관계의 복원에 대한 조금증으로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치밀한 손익 계산이 결여된, 그야말로 한국의 對中 굴욕외교의 시작과 저자세 事大외교를 보여준 전형으로 평가됨. 이는 향후 한미동맹 균열의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불씨를 남겼음.

1. 韓·中 ‘관계 개선’ 협의 발표

□ 개 요

○ 韓·中 양국은 발표문 형식으로 동시 공개(10.31)

- 양국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나 공동성명 형태보다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소통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함
- 이는 공동성명 및 구두합의 중간 형식을 택하도록 하여 양국간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

※ 한국은 ‘韓·中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로, 중국은 ‘中·韓 관계 등에 대한 소통 진행’ 이라는 각각 다른 제목을 표기

○ 주요 발표내용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본래의 배치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함을 재천명하고,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

-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
- 중국측은 미국의 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韓·美·日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 한국측은 그간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
- 양측은 韓中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측은 韓·中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

2. 중국측 반응 및 의도

□ ‘태도 바뀐’ 中 관영매체들, “中·韓 사드 합의 세계가 주목” 극찬

○ 사드 不可만을 강한 어조로 외쳐오던 中 관영매체들이 보여준 변검술(變臉術)

- (관영 신화통신, CCTV) “한국측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중국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 특히 중국 매체들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의 MD체계 참여, 韓·美·日 군사동맹 발전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三不, 3 No)’ 발언을 강조해 보도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이번 합의는 韓·中의 공동이익에 부합

하고, 양국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

- (환구시보) ‘中·韓 양국이 사드 먹구름에서 빠져 나오기로 결정했다’ 題下로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신호와 전제조건, 원칙, 마지노선 등을 보여줬다”고 보도
- (환구시보 사설) ‘한국의 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에서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새로운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주장

□ 중국, 전략적 의도에 따른 치밀한 손익 계산

○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긴 中, 사드 봉합의 전략적 셈법

- 한국의 사드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추가배치는 없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자신의 전략적 우려사항을 문서화하는 실리를 선택
-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美·中 간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체계와 결합해 미국이 구축 중인 전세계 규모의 MD에 편입되는 것으로 판단
- 사드를 매개로 韓·美·日 군사협력 강화가 NATO와 같은 지역 안보동맹의 동북아 출현이라는 식으로 논리 확대
- 중국의 논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의 배치가 아니라 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 군사전략의 일환이자 상징으로 이해
- 결국, 중국에게는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둘러싼 전략구도의 변화가 근심의 핵심이 된다는 논리

- 따라서 한국의 三不 ‘약속’을 받아낸 것은 중국이 협상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시진핑 2기의 순조로운 시작을 알리는 명분으로 작용
- 또한 시진핑 2기 新지도부는 중국국민들을 향한 대내적 명분도 세우는 동시에 후속협의를 통해 자국 입장을 관철시킬 근거도 마련
- 이에 더하여 한반도 위기 고조에서 韓中관계 복원을 앞당기자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시진핑의 체면을 고려
- 결론은 중국이 사드 보복 중단이라는 어음을 끊어주고, ‘3 No’라는 거액의 수표를 받아 챙긴 것임

3. 평가 및 제언

□ 한국정부의 對중 굴욕외교

- 한국의 미래主權을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 가능성 잠재
 - 군사 장비 배치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군사주권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은 상대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
 - 그러나 중국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3 No’를 文정부가 ‘사실상’ 약속
 - 北의 핵미사일 능력으로 향후 사드 2기를 추가로 들여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군사 장비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일

-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차 중국의 패권 추구가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간과
- 7월 韓美정상회담에서 韓·美·日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美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의 ‘韓·美·日 군사협력 우려’를 받아들여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한미동맹 균열의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불씨를 남김

○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을 완전 무시한 저자세 사대외교

- 국제규범과 商관례를 위반한 중국의 치졸한 폭력적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어 피해보상은 언감생심(焉敢生心), 또한 우리국민의 감정 등을 고려한 강력한 유감 표명 한마디와 재발 방지대책 등이 전혀 반영 안된 대한민국의 저자세 외교
- 한국정부가 12월 韓中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정상회담 기간 중에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對중국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그야말로 사대외교의 극치

□ 정책적 제언

○ 굴욕외교를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기회로 활용

- 원칙과 명분이 있는 당당한 외교에 대한 黨차원의 교육·홍보 채널 구축
- 黨과 민간으로 구성된 ‘對中 공공외교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

검토

○ 중국과의 民과 黨 대화 등 소통 채널 구축

- ‘黨대黨’ 의원외교, 韓·中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사드 봉합을 위한 전략 마련

[작성: 윤승현 객원연구위원 ☎ 02-3786-384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 3786. 3800 E-mail : ydi@ydiins.or.kr Website : www.ydi.or.kr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